"학폭 가해, 대입 반영 필요하지만…소송 증가 부작용 우려"

국회 입법조사처, 학폭 대입반영 과제 분석
정시·학생부교과, 학폭 반영 비율 3~6%뿐
"학폭 가해처분, 당락 결정 혹은 감점 요소로"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 이후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지난 24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학입학전형 반영 확대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입 반영 현황과 개선점을 짚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입 반영은 전형별로 차이가 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중요한 평가요소인 학생부 종합전형은 129개 대학 중 111곳(86%)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었다.

반면 학생부 반영이 낮거나 없는 학생부 교과전형(6%), 논술전형(3%), 정시전형(3%) 등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군 또한 정시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고교 졸업 직후 대학 진학을 하지 못했지만, 가해자인 정군은 학교폭력 전력에도 국내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했다는 점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조 조사관은 "대입전형의 유형별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반영에 차이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시모집과 학생부 교과전형에 학교폭력 반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대학입시가 학생의 인생에서 구직과 경제소득 등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 전면 반영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학교폭력 관련 소송이 현재보다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조사관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 반영하기 위한 신중한 논의와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시모집과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거나 일정 점수를 감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시는 수시에 비해 전형 기간이 짧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 대입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교육부는 내달 초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9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방향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 정시에 반영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조 조사관은 "정부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특성과 평가기준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이슬 기자

안중근 의사 추모식 거행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안중근 의사 묘역에서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년 추모식이 거행되고 있다.

여호와증인, 총들 일 없는 '사회복무요원'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대법 "양심 병역거부 대상 아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양심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절한다면 병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군사훈련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양심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우울장애 등으로 징병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14년 6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6개월간 복무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복무한다는 것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복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이 정하는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상고심은 2018년 12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한달 전 전원합의체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상고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A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형성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고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재상고심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의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법 상의 정당한 병역 거부가 아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이 사회요원의 복무를 직접적·구체적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상고심은 "이 역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배척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의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법 상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최초로 판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A씨와 유사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2020년 3월 확정한 적이 있다.

김재환 기자

전두환 손자 "내일 한국행…5·18 유족에 사과하러 가겠다"

"도착 직후 광주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오는 28일 귀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공항에서 출발해 다음 날 오전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이라며 항공편 일정표를 올렸다.

전씨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광주로 가겠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에게 사과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밝혔다.

그간 전씨는 전두환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과 주변인들의 마약범죄 등에 대해 폭로성 게시글을 연이어 게시해왔다.

서선옥 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